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0.

발 의 자 : 김용태·이종배·서천호
유용원·박덕흠·조은희
이성권·강대식·임이자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학교 주변 순찰·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,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 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또한,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 제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

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8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8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, “학생의 안전대책”을 “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”으로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(이하 “통합관제센터”라 한다)을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의8(학생의 안전대책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0조의8(학생의 안전대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(이하 “통합관제센터”라 한다)을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<u>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⑤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합관</u>
<u><신설></u> 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</u>	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	<u>제센터의 설치·운영</u> ----- ----- --.
---------------	---